

# “위드 코로나 시대, 올 추석연휴는 집에서 보내세요”

광주시 14일부터 10월 4일까지 3주간 특별방역 주간 운영

광주시가 시민들의 안전하고 건강한 추석 연휴를 위해 ‘코로나19 추석특별방역 및 시민생활안정대책’을 추진한다. 이번 대책은 코로나19 재확산 추세가 안정되지 않은 상황을 고려해 코로나19 상황 대응을 위한 현안을 중심으로 마련됐다.

시는 14일부터 10월 4일까지 3주간 코로나19 대응 특별방역과 시민생활안정 대책 분야로 나눠 2개 분야 11개 항목 50개 과제를 추진한다.

◇코로나19 완전 차단하기=코로나19 대응 특별방역 분야는 ▲추석 특별 방역주간 운영 ▲빈틈없는 방역체계 유지 ▲차질 없는 의료서비스 제공 등 3개 항목 12개 세부과제다.

시는 14일부터 10월 4일까지 추석 특별방역주간을 운영해 시민들을 대상으로 ‘추석연휴 집에서 보내기’, ‘코로나 함께 극복하기’ 범시민운동을 통해 생활방역 확산 및 실천 분위기를 조성한다.

명절 전후로 종교·문화시설 및 각종 사업장 등 14개 유형 3만5700여 곳을 대상으로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

추석 연휴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성묘·봉안시설과 다중이용 교통시설, 전통시장, 대규모 점포 등에 대해서 맞춤형 특별 방역대책을 수립·적용한다.

추석연휴방역·시민생활안정

2개 분야 50개 과제 추진

3만 5700여곳 집중점검

묘지·전통시장 맞춤형 방역

격리자 긴급 이송체계 구축

소외 이웃 긴급 돌봄 지원

시는 추석 연휴 기간동안에도 빈틈 없는 방역체계를 유지한다. 코로나19상황실을 상시 운영하고, 집단환자 발생 등에 대비하기 위한 즉각대응반을 구성해 비상상황에 24시간 대응한다. 해외입국자 관리 및 격리시설도 지금처럼 정상 운영한다.

자가격리자에 대해서 특별관리 대책을 수립해 긴급 대응반 구성, 원거리 무단이탈 대비 이송체계 구축, 불시점검 실시 등 평소보다 강화된 관리체계로 운영할 방침이다. 5개 구정 선별진료소 및 감염병 전담 병원도 정상 운영하며, 코로나19 신속 검사와 치료체계를 유지한다.

명절 기간 진료공백 방지를 위해 응급진료체계를 확립하고 당직 의료기관 및 당번

약국을 운영하여 차질 없는 의료서비스도 제공할 예정이다. 당직의료기관은 응급의료포털(www.e-gen.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민이 편안한 추석 명절 만들기=시민생활안정대책 분야는 소외이웃 명절 돌봄공백 지원, 특별 물가관리 및 전통시장 활성화, 근로자 체불임금 해소, 귀성객 교통소통 및 수송대책, 각종 재난 및 안전 관리, 수돗물·연료 안정적 공급,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 조성,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 등 8개 항목 38개 과제로 추진된다.

우선 명절기간에 돌봄공백으로 불편을 겪는 시민이 없도록 소외이웃을 지원한다. 취약노인, 장애인, 저소득 한부모가족, 저소득 아동에 누수 없는 돌봄서비스를 제공한다. 긴급복지 지원 기준을 완화해 코로나19로 힘든 복지사각지대 위기 가정도 지원한다.

코로나19로 침체한 민생현장도 돕는다. 온누리상품권 구매, 전통시장 이용 캠페인, 로컬푸드 직매장 및 농산물 직거래장터 운영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추진한다. 물가안정을 위한 상황실과 대책반을 구성·운영한다. 추석 연휴 귀성객과 성묘객의 교통 편의를 위해 교통소통 및 수송 대책도 코로나19 시대에 맞춰 강화한다.

연휴 기간 광주종합버스터미널을 지나 는 노선을 대상으로 운행 대수와 횟수를



광주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은 14일 오전 북구선별진료소에서 의료진들이 코로나19 검체채취 준비를 하고 있다. 복적이던 선별진료소가 모처럼 한가해 보인다. /최현배 기자choi@kwangju.co.kr

증화하는 등 시내버스 특별 수송 대책을 마련하고, 29일에는 고속열차를 이용하는 귀성객 편의 제공을 위한 지하철 연장 운행을 실시한다.

또 귀성객과 성묘객이 불편 것으로 예상되는 광주종합버스터미널, 국립5·18민주

묘지, 송정역 등 다수밀집지역에 구급차량을 현장 전진배치해 코로나19 의심증상자 발생 시 신속하게 선별진료소로 이동할 수 있도록 즉시 이송체계를 구축한다.

이정식 광주시 자치행정국장은 “시민들의 건강한 연휴와 민생안정을 위해 각 부

아별로 추석 대책을 철저히 대비해 나가겠다”면서 “시민들도 위드 코로나 시대의 현명한 추석맞이로 나와 내 가족의 안전을 지키는 연휴가 될 수 있도록 생활방역수칙을 준수해달라”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 민주, 추미애 엄호 총력…“대부분의 의혹 사실 아님 드러났다”

추 “보좌관 전화 밝힐 형편 못돼”

더불어민주당은 14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군 복무 시절 특혜 의혹의 상당 부분이 사실이 아님이 드러났으며 대대적인 엄호에 나섰다.

이낙연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정치권은 정쟁을 자제하고 검찰 수사를 돕고 그 결과를 기다리는 게 옳다”며 “아당이 정치공세를 계속하면 우리는 사실로 대응하고 차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야당과 언론이 제기한 여러 의혹은 모두 사실이 아니고 진실이 많이 밝혀졌다”며 “국회는 경제 살리기에 집중해달라”고 촉구했다.

김종민 최고위원은 추 장관 아들의 자대 배치 청탁 의혹에 대해 “박근혜 정부 말기 탄핵이 논의되던 시절이고 추 장관은 당시 야당 대표여서 납득할 수 없다”고 일축했다. 또 “(군에) 규정에 대한 문의 전화를 한 정도라면 법적으로 문제 삼거나 부적절하다고 보더라도 장관 사퇴 정도까지 정치적으로 문제 삼을 사안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박범계 의원은 CBS 라디오에서 “장관,

대표이기 전에 한명의 어머니”라고 했고, 김남국 의원은 KBS 라디오에서 “어머니들이 군에 자유롭게 연락을 하는 등 병역 문화가 달라졌는데 이 자체를 문제 삼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최초 제보자인 당직 사병의 배후설도 계속됐다. 김경협 의원은 페이스북에 “특혜 병가 의혹을 최초로 제기한 제보자(당직 사병)는 육본 대위의 외압이라고 왜 거짓 말했을까? 교육생 가족 전체에게 했던 오리엔테이션을 왜 ‘서 일병 할머니에게 청탁하지 말라는 교육을 40분 했다’고 거짓 말을 했을까”라며 “누가 시켰는지 배후를 반드시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추 장관에 대한 야권의 공격을 ‘검찰개혁 흔들기’로 규정하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을 위한 관련 법안을 연이어 발의하며 개혁 입법에 속도를 내고 있다.

한편, 추 장관은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아들의 군 시절 병가 연장 과정에서 당시 추 장관의 의원실 보좌관이 부대에 전화를 걸었는지’를 묻는 국민의힘 윤재욱 의원의 질의에 “전화를 제가 시킨 일이 없다”고 밝혔다. 추 장관은 “실제 보좌관이

전화했는지 여부, 또 어떤 동기로 했는지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말씀드릴 형편이 못 된다”며 “저는 피고발인 입장이니까 검찰 수사를 기다리는 것밖에 할 수 없다”고 말을 아꼈다.

추 장관 부부가 2017년 6월 아들의 휴가 연장을 국방부 민원실에 문의했다는 의혹과 관련한 질의에는 “제가 국방부 민원실에 전화한 사실은 없다”고 답했다. 윤 의원이 ‘아들의 군 시절 특혜 의혹에 대해 특임 검사를 임명하거나, 특별수사본부를 설치해 수사하도록 할 생각이 있나’라고 묻자 추 장관은 “요건에 맞아야 하는 것”이라며 거부했다.

추 장관은 지난 7월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에서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 질의 과정에 “소설을 쓰시네”라고 불쾌감을 드러냈던 것과 관련해 “그런 말씀을 드리게 돼 상당히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추 장관은 “(당시 윤한홍 의원이) 법무부 차관에게 ‘아들 일을 잘 처리해준 보상으로 그 자리에 왔느냐’는 상당히 불편한 질문을 했길래 모욕감을 제가 대변해준 것”이라며 “독백이었는데, 스피커가 켜져있었다”고 부연했다.

/ 오광록 기자 kroh@연합뉴스

## 문 대통령 “방역 단계 완화, 자영업자 생업 위한 최소한의 조치”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수도권 방역조치 일부가 완화된 것과 관련해 “방역과 경제 모두에서 국민의 삶을 지키기 위해 전문가와 현장의견을 종합해 내린 방안”이라며 국민의 이해와 협조를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이번 조치는 엄격한 방역기조를 유지하면서도 경제적 타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며 “한계 상황에 처한 중소기업인과 자영업자가 생업을 포기하지 않도록 하는 최소한의 조치”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그동안 강화한 방역조치가 효과를 발휘해 수도권 확진자 수도 많이 줄고 신규 확진자 숫자 못지않게 중요한 감염재생산지수도 0.7 정도로 떨어졌다”며 “안심할 수 없지만 최근 한 달간의 코로나(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재확산 상황은 서서히 진정돼가고 있다”고 결정 배경을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코로나가 방역 체계의 통제 범위 안에 있다는 판단과 함께 장시간 영업 제한으로 생계 위협에 직면한 분에게 무작정 희생만을 강요할 수 없다는 점도 이유가 됐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 대통령은 “코로나에 앞서 생활고로 쓰러진다는 절박한 호소에 응답하지 않을 수 없다. 조금이라도 숨통이 트이길 기대한다”며 “긴급 추진하는 4차 추경도 같은 목적”이라고 말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코로나와의 전쟁은 장기전”이라며 “긴 시간 코로나와 함께하며 살아야 하는 상황에서 방역과 경제 어느 것 하나 소홀히 할 수 없다. 방역이 곧 경제지만, 방역이 먹고사는 문제까지 해

결해주지 않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 완전 종식까지 방역과 경제 사이에서 아슬아슬한 균형을 잡아가야 갈 수밖에 없다”며 “방역도 경제도 반드시 성공시켜겠다”고 역설했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코로나19 상황에선 고용 유지가 정말 중요하다”며 “고용을 유지할 수 있는 적절하고 효율적인 방안을 끊임없이 고민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임동욱 선임기자 tuim@kwangju.co.kr

